

깎뎠기 홀딩스 체제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승리를 향해 뚝뚝뚝뚝 나아가십시오.

윤창현 본부장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SBS 식구들께 안부인사 먼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1년 여 동안 사측과의 SBS 수익구조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 12일 임시노사협의회를 통해 SBS가 처한 위기적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미 내용적으로 파산해 깎뎠기만 남은 지주회사 체제의 해체를 통해 조직의 기능과 자산을 통합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최종적인 입장을 사측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이미 조합원 간담회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설명 드린 것처럼 SBS 수익구조 정상화 논의를 담은 2017년 10월 13일 노-사-대주주 간 3차 합의의 이행이 1년 이상 지체된 상황에서 더 시간을 끌다가는 구조개혁의 기회도, 지상과 위기 탈출의 기회도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절실함을 담은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스스로 약속한 답변 시한을 1주일이나 넘긴 지난 1월 23일,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사측 안은 그러나 노동조합이 지난 12월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안으로 그 동안 사측 스스로도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주장해 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사측은 제시 안이 외부 회계법인의 컨설팅까지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정작 노동조합이 제시한 미디어 홀

딩스 합병을 통한 SBS로의 기능과 자산 통합 방안은 단 한 글자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저와 노동조합 집행부, 노동조합 고문단은 수 차례 검토 끝에 사측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사측과 대주주가 오는 2월 8일까지 지주회사 체제 해체를 전제로 한 협상안을 제시하고, 대주주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최종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미 10.13 합의 이행 시한을 1년 이상 넘긴 상태에서 사측이 답변 시한을 두 차례나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선의를 마지막으로 담아 제안한 것입니다.

사측과 대주주는 시대의 흐름을 지금이라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대주주의 무분별한 사익 편취를 가능케 했던 지주회사 체제의 자-손회사 지분하한선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의 폐해를 보다 못해 이에 지주회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금지와 지상과 방송 소유지분 한도를 다시 30%로 하향시키는 방송법 개정 논의까지 서서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을 강조하는 거스를 수 없는 움직임으로 시점의 문제일 뿐 머지않은 미래에 SBS 미디어그룹 앞에 현실

로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내용적으로 파산한 SBS 미디어 홀딩스 체제는 법적으로도 해체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속 불가능한 체제 유지를 위해 SBS의 내부갈등과 체력 약화, 전략 부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노와 사, 대주주가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제라도 지주회사 체제 해체를 전제로 한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대책 없이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홀딩스 체제 해체를 위한 서명운동에서 확인됐듯이 SBS 구성원들로부터 탄핵당한 남은 지주회사 체제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측과 대주주가 역사의 흐름과 SBS 구성원 절대 다수의 의지를 거스르며 SBS의 미래를 쪼먹는 체제를 끝까지 유지하려 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은 최종 답변 시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을 믿고 변함없이 함께 해주십시오. 1,100여 조합원의 단결된 힘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요, 미래를 여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다가올 승리를 위해 뚝뚝뚝뚝 나아가십시오.

다 함께! 또 한 걸음!

2019. 1. 30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장 윤창현 드림

굿바이, 홀딩스! 다시, SBS !! 서명운동 700명 돌파



6개 SBS 직능단체(기술인협회, 기자협회, 방송촬영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기자협회, PD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지난 1월 23일부터 시작한 <SBS 미디어홀딩스 합병과 지주회사 체제 청산 SBS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이틀 만에 참여인원이 5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1월 29일 오후까지 집계한 결과 7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SBS 구성원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주회사 규제 강화> 칼 빼든 공정위

“지주회사의 터널링·사익편취 가능성... 수익구조 왜곡 문제”



지난 1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지주회사 운영실태 및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열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신규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해 이미 내놓은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지주회사에 대한 추가 규제 강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왜곡 문제>를 중점 제기하면서 <자회사의 이익침해 및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주회사가 자기 또는 다른 계열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키기 위해 특정 자회사의 손실을 유발하거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것이다. 특히 이를 <자회사로부터 지주회사로의 터널링 문제>로 규정하고 <한국의 지주회사 시스템에서 최근 주목격되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더 나아가 보고서는 결론을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는 향후 정책집행 과정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며 <현행 사후규제의 기준을,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 수익구조상의 문제를 포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마치 SBS의 지주회사 체제 10년을 표본 삼아 연구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지만 실제 이 보고서 조사대상에 SBS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동안 SBS 노동조합이 제기해 온 ‘이익 터널링’ 등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점을 동일하게 지적하면서 규제 필요성을 내세운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상조 現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SBS 지주회사 체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방송사에 대한 지주회사 소유제한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검토’,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제도적 견제장치를 제안할 정도로 SBS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또 한가지 눈 여겨 볼 것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대부분 100% 보유’한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다. 즉 <자회사 지분율을 높

이도록 유도할 경우 자회사로부터 지주회사로의 터널링 유인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SBS상황에 비추어 재해석해 보면 <지주회사인 홀딩스는 현재 SBS 지분을 36.9%만 갖고 있는데 이 지분을 100%에 가깝게 더 높이도록 하면 SBS 수익을 밖으로 빼내야 할 이유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지상파 방송사인 SBS는 방송법상 소유지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홀딩스는 SBS 지분을 40% 이상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공정위가 규제를 강화해, 지주회사가 가져야 할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상장사 기준)으로 높인다면,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다른 방송사는 아무 상관 없지만-) SBS는 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대로 홀딩스는 SBS 지분을 40%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측과 대주주 스스로 지주회사 체제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언론단체 중심으로 방송법상 지상파 소유지분 제한을 다시 30% 아래로 낮추자는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이다.

꼭 SBS 지분 문제뿐 아니더라도 자회사 지분을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른바 SBS미디어그룹이 외부 지분투자를 받아서 하는 새로운 사업 추진은 갈수록 어렵게 된다.

물론 공정위의 이런 규제 강화 움직임은 법 개정이 동반돼야 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문제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왜곡과 자회사 지분율> 같이 미디어홀딩스 체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SBS 외부에서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SBS의 홀딩스 체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청산해야 하는 또 한가지 이유다.

2018년 임금 난항...조합, ‘조정 신청’ 검토

2018년 임금 협상은 12차 실무협상까지 진행됐지만 여전히 노사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이 지난해 경영수지를 구체적으로 추산한 것이 이달 중순쯤이어서 본격적인 논의는 2주 남짓 이뤄진 셈이다. 노동조합은 2018년 기본급 동결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그 동안 협상에 임해왔다.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 조건에 대한 추가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 입장 차가 현격할 경우, 노동조합은 임협 결렬을 선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